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강릉해양경찰서 설립 서둘러야	1
江原日報	04면	도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9명 위촉	2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3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3
엔사이드	온라인	강원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4
江原日報		홍천군체육회 '제13회 홍천군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 개최	5
江原日報	21면	[동정] 유순옥 도의원(비례)	5
강원도민일보	04면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타조사 '발등에 불'	6
강원도민일보	04면	줄줄새는 소양강댐 출연금... 초과수익 도내 지자체 환수 모...	6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신북읍 군소음 피해 지원 본격화	7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부론산단 1519억원 투자 유치	7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 주문진 향호 지방정원 밑그림 그린다	8
강원도민일보	13면	인제 서화 평화체육관 연말 준공 '속도'	8
江原日報	04면	기후변화로 평화의담 언제든 넘칠 수 있다	9
江原日報	13면	영랑호 벚꽃축제 사고 제로화 나선다	9
江原日報	07면	강원지역 경기 회복세 전망	10
江原日報	15면	주말 동강할미꽃 축제 오세요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향토 상권 차별화 전략 필요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환자 절망, 질타 안중에 없나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조직개편, 줄속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	14

2024 03 26 ()

19

江原日報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폭풍과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어업 관련 해양사고 증가와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및 해양레저 수요의 증가로 해안 치안, 관련 안전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강릉해양경찰서 설립이 시급하다. 최근 5년간 어업해양사고의 경우 근해어업은 456건에서 562건으로 106건이 증가했으며, 연안어업은 845건에서 1,08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지역 해양사고 선박의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51척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어선의 사고 비율은 전체 사고 건수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정비 불량

과 운항 부주의로 분석됐다. 이는 동해안 어촌의 고령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출어 횟수가 줄어들면서 어선의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강릉지역의 해양민원 출동 건수는 2017년 267건, 2018년 336건, 2019년 37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재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민원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속초·동해·울진·포항해양경찰서 5곳의 산하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강릉은 전담 해양경

강원포럼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



찰서가 없어 강릉 북부 해안(주문진~영진)은 속초해양경찰서가, 남부 해안(사천~옥계)은 동해해양경찰서가 각각 담당하며 업무를 분할해 맡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의 어려움은 물론 해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속초시나 동해시로 이동해야 하고 그에 따

로 어촌뉴딜300사업, 해양레저 중심권 조성사업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경포해수욕장, 안목 커피거리, 주문진 및 옥계 금진해변의 서핑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 가 해안지역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어느 때보다 해양 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업과 해양 관련 민원 처리 시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속초와 동해해양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처리 체계

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강원해역의 경우 4계절 중 선박통행량이 증가하는 봄철

에 전체 사고의 3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봄을 맞는 지역 어민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 동해안 해안선 455km의 17.1%인 78km의 해안을 가지고 있는 강릉 어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연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의 치안과 안전사고, 해상 교통안전 관리, 해양 환경 보전 등 급증하는 강릉 해안지역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강릉해양경찰서'의 신설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의 설립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다.

강릉해양경찰서 설립 서둘러야

른 시간과 경비를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강릉시에 있는 어촌계라고 하더라도 서로 관할 지역이 달라 해양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면 속초해경이나 동해해경에 각각 연락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관할 부서와 업무의 모호성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강릉은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78km의 해안선과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2개소 등 총 15개소의 크고 작은 어항과 500여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동해안 중심의 해양수부도시이며 정동·심곡·주문진소들을 중심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25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2023 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해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도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9명 위촉

도·도교육청 부당 집행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2023 회계연도 강원 자치도·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위해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최재민(원주)·진종호(양양)·유순옥(비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 13일까지 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

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산검사를 수행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청,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도교육청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결산검사를 한다. 결산검사 종료 후 감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이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해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해 도와 도

교육청이 집행한 예산과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부당한 집행과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도·도교육청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2024 03 26 ()

22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권혁열)가 25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유순옥 대표위원 등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 9명을 위촉했다.

 **연합뉴스**

2024 03 25 ()

강원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출처=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2023회계연도 강원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9명을 위촉했다. 권혁열 의장(가운데)과 결산검사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3.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강원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촉

김아영 기자

-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 수행 다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3월 25일 도의회 상담실에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한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로 해당 기간에 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산검사를 수행한다.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이 주관이 되어 집행기관에 마련된 별도의 결산검사장에서 실시하며(도청 3.25.~4.3. 도교육청 4.4.~4.13.), 결산검사 종료 후 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이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예산과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부당한 집행과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2024 03 25 ()

江原日報

홍천군체육회 '제13회 홍천군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 개최



홍천군체육회(회장:신우섭)는 22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시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원 및 홍천군의원 이영욱, 홍성기, 도의원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김숙자, 홍천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홍천군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4 03 26 ()

21

◇유순옥도의원(비례)은



26일 오후 3시
동해시 평생학
습관에서 열리
는 국제라이온
스협회 354-E

(강원)지구 제12지역 2023-
2024 합동월례회 및 봉사대회
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3 26 ()

04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예타조사 ‘발등에 불’

도 5월 종료 앞 경제성 보완 집중
기재부 “2차 점검 후 최종 결과”
재연장 불발시 하반기 결과 전망

속보=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본지 2023년 11월
17일자 1면)가 오는 5월 초 종료된다.

예타 조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온다. 강원도와 도내 지자체는
매달 회의를 여는 등 경제성 보완에 집

중하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
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한을 오는 5월
초까지 3개월 연장했다. 조사 기한이
재연장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의 중
합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예타 결과
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KDI는
지난달 27일 1차 점검 회의를 진행했
다. 2차 점검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KDI 관계자는 “1차 점검 회

의에 대한 주무부처의 답변을 기다리
고 있다”며 “(올해 예타 종료 여부는)
국토교통부나 주무부처의 사업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차 점검을
진행한 뒤 종합평가와 재정사업평가위
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조사 결과
가 나온다”고 했다.

2차 점검 회의 이후 재정사업평가위
원회 심의·의결까지 통상 두 달이 소요
된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은
삼척시와 강릉시 간 45.8km 구간을 잇
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말 예비타당

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돼 이듬해 2월
부터 예타 조사를 받고 있다. 2031년까
지 총 1조33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삼척~강릉 구간은 부산과 강원 고성
을 잇는 동해선의 한 축이지만, 선로 노
후 문제로 사실상 단절 구간으로 분류
된다. 이 구간을 제외하고 동해선 모든
구간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공을
앞뒀다. 강원도는 삼척~강릉 구간이
환동해권의 핵심 물류·교통망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낮은 경제성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
사에서 경제성 비용편익(B.C)이 0.
65대로 산출됐다. 1.0을 넘겨야 사업
성을 인정받는다. 강원도는 누락된 개
발 예정 사업의 예타 조사 반영에 나서
는 등 경제성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강원도와 예
타 대응 회의를 매달 두 번씩 열고 있
다”며 “경제성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예
타 기관에 두 차례 제출했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26 ()

04

줄줄새는 소양강댐 출연금... 초과수익 도내 지자체 환수 모색

강원도가 소양강댐에서 나온 초과 수
익금을 도내 지자체에 환수하는 방안
을 모색한다. 소양강댐은 매년 1400여
억원의 수익금이 나오지만, 인근 지역
주민지원 예산은 60여 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
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안
에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를 담았다.
특례 조항은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
을 초과한 수익금을 거둘 시 대통령령
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고, 댐 수익금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계 핵심이다. 강원도는 소양강댐의 연
간 수익금을 1400여억 원으로 추산하
고 있다. 이와 견줘 소양강댐 인근 5개
시·군(춘천·홍천·화천·인제·양구)에
배분되는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60억~75억원 수준이다.

댐건설관리법은 댐사용권자가 출연
금을 조성해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쓰
도록 규정한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28개 다목적
댐에서 연간 500억~6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걷는다. 이중 소양강댐의 출

연금은 150억~200억원을 차지한다.

도내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이 연
간 60억~75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소
양강댐 출연금의 절반 가량이 타 지자
체로 배분되는 셈이다. 김덕형

춘천 신복읍 군소음 피해 지원 본격화

피해지역 주민협의체 첫 회의
공원·방범시설 조성 복지 향상
시, 군부대 이전 가능성 협의

항공부대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신복읍 유포3리, 울문2·3·4·5리, 천전1리가 대상이다. 위원장은 박광장 울문2리 이장이 선정됐다.

신복읍 항공부대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본격화됐다.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 첫 회의가 25일 오후 신복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시행된 '군소음 보상법'과 2021년 제정된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조례'에 따른 조치다.

이날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지원사업 발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민지원 사업은 방음시설 설치나 냉방비 지원 등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이나 공원·방범시설 조성, 가로등·도시가스 배관 개선 등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경기도 김포시는 마을회관 신축이나 도로개선을, 파주시는 배수로 정비, 양주시는 상수도 보급과 생태연못 습터 조성 등을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한다.

울문 2리의 경우 마을회관 신축을 검토하는 등 신복읍 소음 피해지역 별로 5월까지 지원 사업을 발굴한다. 이후 6월 주민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9월쯤 예산이 결정, 연말 보조금이 교부될 계획이다. 예산은 100% 춘천시가 부담한다.

더욱이 신복읍 주민들이 수년 간 항공부대 이전을 요구할 정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할 사항이어서 이번

지원사업이 군과 민간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박광장 위원장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며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 항공부대 인근에 고통받았던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신복읍 항공부대 이전도 추진된다. 춘천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5월쯤 국방부 등을 방문, 항공부대 이전 가능성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오세현·박재혁

원주 부론산단 1519억원 투자 유치

도-시-유치기업 8곳 투자 협약
공장 신증설·282명 신규 고용
시 "부론 IC개설 등 인프라 조성"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유치기업 합동 투자협약식이 25일 호텔인터뷰고 원주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기업 8곳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도권 및 강원도 소재 기업 8곳이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신규 투자를 약속하면서 산단 조성 및 부론IC 개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25일 호텔인터뷰고 원주에서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론일반산업단지 유치 기업 8곳과 합동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투자 협약 참여 기업은 나노인텍, 넥서스파마, 대경에스코, 월드브리

지산업, 인바이오, 케이스탑, 필립산업, 한상특수필터다. 이중 2곳은 도내 기업의 신증설과 창업이며, 나머지 6곳은 서울, 인천,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공장 신증설이다.

협약에는 이들 기업의 총 1519억

원 규모 지역 투자, 282명의 신규 고용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투자가 지방세수와 고용 증대는 물론 지역 원·부자재 및 협력업체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추산한 협력업체 취업 유발, 연관산업 확장 등을 통한 간접 고용효과는 1170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기업은 의약·화장품, 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금속·플라스틱 가공 등 다양한 업종으로, 유치시 지역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원강수 시장은 "어려운 시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유치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론 IC 신설, 정주여건 개선 등 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4 03 26 ()

강릉 주문진 향호 지방정원 밑그림 그린다

11

조성계획·실시설계 용역 착수
토지 보상 등 기반 작업 진행
시, 국가정원 지정 목표 속도

강릉시가 주문진 '향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최근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용역비 13억5000여만원을 들여 실시하는 이번 용역은 건화, 화신엔지니어링, 대성종합엔지니어링, 효림이엔지 등 컨소시엄이 낙찰돼 이달부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한다. 시와 용역사는 지방정원과 함께 국가정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짜며 이와 병행해 일부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향호 지방정원은 총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번지 일대 72만㎡를 우선 지방정원화하고 점차 부지를 104만㎡까지 늘려 국가정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도로와 토양개량 등 기반 작업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토지보상은 지방정원 부지내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국가정원 부지도 토지주의 매각 희망에 따라 매입할 계획이다.

또 부지내 조경 등을 위해 ITS컨벤션센터 조성 부지에서 반출되는 소나무 190그루를 사유지와 국유지에 이

식해 놓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지 정비를 위해 토양(마사토)도 대형트럭 1240대 분량 1만8600㎡를 반입해 정원조성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향호의 지방정원이 완공되면 주문진 등 북부권 관광 인프라 확충

은 물론, 소들 등 해안관광지와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그린 산업을 통한 관광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4 03 26 ()

인제 서화 평화체육관 연말 준공 '속도'

13

118억원 투입 지상 2층 규모
공정률 12% 토목공사 착수
스포츠마케팅·경제 활력 기대

인제 서화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 공사가 연내 준공목표로 순항중이다.

인제군서화평화체육관 신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균형발전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49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 지난 2023년 8월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

서화평화체육관의 이달 현재 공정



서화평화체육관 조감도

률은 12%이며, 최근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해제와 함께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4년말 완공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화 평화체육관은 총 2951㎡ 규

모에 지상 1층과 2층으로 지어지며, 배드민턴·농구·배구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체육관 내부에는 각종 대회와 행사 개최를 위한 무대장치 등도 설치된다. 서화 평화체육관은 서화면 생활체육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실내·외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군의 경우 6개 읍·면의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으로 75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올렸다.

군은 올해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60개와 전지훈련팀 70개 팀을 유치해 92억원의 경제효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서화 평화체육관을 비롯해 오는 2026년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스포츠마케팅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최상기 군수는 "지역 군부대 군장병을 포함한 사실상 지역 거주인구는 7만명에 달한다"며 "7만 군민의 수요에 맞춰 기초인프라 시설과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2024 03 20 ()

江原日報

04

기후변화로 평화의댐 언제든 넘칠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2040년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 댐들이 폭우로 인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강원지역에서 비와 눈이 자주 내리는 등 강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로 인한 대규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사회기반시설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수량이 늘고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평화의댐과 청평댐은 2040년 이전에도 언제든 넘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

감사원 '침수 위험 증가' 예측

강수량 늘고 집중호우 잦아져 2040년 이후 사고 가능성 커져 소양강댐·횡성댐도 아슬아슬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 통보

됐다. 강수량은 늘고 집중호우는 잦아졌지만, 댐의 설계 기준은 20년 전 기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소양강댐은 장기적으로는 물이 넘치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

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2071년부터는 소양강댐마저 넘칠 것으로 예측됐다.

횡성댐은 2040년까지는 물이 넘치지 않지만 2041년부터는 댐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비가 내리며 넘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팔당댐, 횡성댐은 물론 소양강댐·충주댐 같은 한강 상류 대규모 댐까지 넘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원지역은 최근 강수량과 적설량이 가파르게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 강원자치도 내 강

수량은 227mm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평년 강수량은 87.6mm로, 2023년 겨울 2.6배의 비와 눈이 더 내린 셈이다. 눈·비가 온 일수도 25.4일로 평년(19.4일)보다 많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기후 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사업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행안부와 환경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kwnews.co.kr

2024 03 20 ()

江原日報

13

영랑호 벚꽃축제 사고 제로화 나선다

【속초】속초시가 오는 30~31일 이틀간 영랑호 일대에서 열리는 2024 영랑호 벚꽃축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매년 3~4월 10만명 이상이 찾는 속초의 대표적인 벚꽃명소 관광지인데다가 올해 첫 벚꽃축제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와 교통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19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영랑호 벚꽃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실무조

속초시 오는 30~31일 개최... 안전관리 만전

행사 현장 합동점검·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정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속초시 미래도시국장 주재로 부서별 관계자와 속초경찰서·속초소방서·속초해양경찰서 등 분야별 실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행사장 질서유지와 영랑호 일대 교통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행사장과 시설물별 관리자의 임무, 비상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행사장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도 함께 점검했다.

행사 전일인 29일에는 행사 현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사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방문객 안전관리에 만

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속초 영랑호 벚나무는 호수 둘레 7km를 따라 조성돼 있으며, 꽃 개화기에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만개한 봄꽃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2024 영랑호 벚꽃축제에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고예방 대책 수립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江原日報

2024 03 26 ()

07

강원지역 경기 회복세 전망

한은 강원본부 경제 보고서

강원지역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공개한 '지역경제 보고서(2024년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원권 경기는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강원수출 역시 큰 폭으로 늘고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했다. 물가 및 고용도 대체로 양호했다.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2.8% 상승해 전분기(3.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1~2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00명 늘어났다.

이같은 경기 동향에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전국적인 회복세와 비교하면 더디지만 하반기에도 성장 흐름이 지속돼 연간으로는 기존 전망수준(1.3%)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감소 불구 소폭 개선 서비스·제조업 생산 증가 취업자 전년비 4천명 늘어

다만 여전히 장기 평균(1% 중후반)을 하회하는 점에서 장기 추세를 상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향후 부동산 PF 구조조정 영향, 관광객 추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강원본부는 '강원지역 고용의 계절성과 대응방안'을, 강릉본부는 '강원 영동지역 건설업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을 각각 발표했다. 강원지역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취약하고 관광업이 발달해 고용의 계절성(지니계수)이 0.29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평균인 0.13과 비교해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원본부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겨울철 배치, 연간 고

용 확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동계스포츠시설 유치, 반도체산업 육성,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상대적으로 날씨 영향을 덜 받는 산업 유체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릉본부는 영동지역 건설업의 건축공면적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6.1% 감소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미분양 주택수 급증, 부동산업 대출부실의 건설업 전이 등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업체 부도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만큼 각 지자체는 정부와 협력해 SOC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등 건설업 부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정기자 hyun@kwnews.co.kr

주말 동강할미꽃 축제 오세요

22일 정선 생태체험장 일원

“이번 주말 정선 동강할미꽃 보러 오세요.”

봄의 전령사 동강할미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제18회 정선 동강할미꽃 축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정선읍 굴암리 동강할미꽃 거리와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정선 동강할미꽃은 동강의 석회암지대 절벽에서 자라며 꽃이 필 때 하늘을 보고 피면서 갖가지 다양한 색을 자랑한다.

올해 정선 동강할미꽃 축제는 동강할미꽃보존연구회와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3대가 함께하는 할미데이’를 주제로 열린다. 22일 오전 11시 ‘할미데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버스킹 공연을 비롯한 할미꽃 화분 만들



◇동강할미꽃.

기, 동강 할미꽃 시 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 처음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모델로 나선 ‘시니어 패션쇼’가 열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23일 열리는 세대공감 놀이터는 축제의 취지를 살려 온 가족이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딱지치기, 구슬놀이 등이 펼쳐지는 등 동강할미꽃 사진 촬영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축제와는 차별화된 색다른 체험과 풍성한 축제로 치러진다.

정선=김영석기자 kim711125@

강원도민일보

2024 03 26 ()

/ 19

향토 상권 차별화 전략 필요

-도심 프랜차이즈 점령...상가특색 실종

강원 도내 주요 도심 상권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영업자들도 안정성을 이유로 가맹점을 선호합니다. 이런 상황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여서,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고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상권이 특색을 잃으면 자본의 역외 유출도 가속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 특성을 살린 향토 점포를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권을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강원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가맹점은 2022년 기준 9673개로, 2018년 7117개에서 2556개로 26.4%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 180만명이 넘는 전남의 가맹점수가 9050개인 것과 비교해도, 강원도는 유독 프랜차이즈 업종이 상권을 주도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대표적입니다. 중심 상권인 명동 일대에는 153개의 점포가 모여 있는 곳이지만, 그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제외한 개인 점포는 10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가맹점 강세는 '식품' 쪽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강원도의 9673개 가맹점 중 한식당이나 카페, 치킨전문점 등 음식점 개수가 5406곳으로 5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 속에서 개별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재고관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인들은 경쟁력에서 프랜차이즈를 쫓아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점포는 메뉴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부분에서 신경써야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어 창업에 훨씬 유리합니다.

지역 상권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가 나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가맹점 강세는 강원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가게들이 사라지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마을 상권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지역의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자본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상황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도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6 ()

/ 19

환자 절망, 질타 안중에 없나

-국민 우롱 의료재난 정부·의사 공동책임져야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는 의료대란 장기화로 여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갖가지 질환 증상에 수술과 검사, 치료와 재발 등으로 질병과 싸우며 압박감을 겪는 환자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하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공의 의료 거부와 의대생 휴학 등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교수마저 집단사표를 가세하며 최극단으로 치달는 의료재난에 국민과 환자의 질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으로 결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어제(3월 25일) 성명을 내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서야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인가”라며 의료진의 빠른 복귀는 물론 환자 중심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단 한번도 환자 중심으로 사고되거나 영된 적이 없었고, 이번 의료대란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참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며 집단행동의 즉각적 종단을 피력했습니다. 환자가 진료 연기, 취소 등으로 인

한 불편이나 불안, 피해를 실제로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최선의 수술이나 항암치료, 장기이식 등 치료가 시급한 경우 사태 장기화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를 정부와 의사 양측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수술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속칭 ‘응급난민’ ‘응급실 뺑뺑이’는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강원연구원 임재연 연구위원의 보고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가는 강원도민 수는?’에 따르면 60분 이내 응급센터 도착이 불가능한 강원지역은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역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설 및 장비 확충에 의사 수 증대는 필수입니다.

만성적인 의사인력난을 겪는 강원도내 상황을 계속 외면한다면 의료계를 향한 비난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파업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의료재난 사태로 물고간 정부 책임은 큼니다. 이번 의료사태가 종료되면 국민은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일방 주장에 몰입해서는 탈출구도, 해법도 없습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환자 중심 의료에 협력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3 26 ()

/ 19

道 조직개편, 졸속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

강원특별자치도는 올 7월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SOC정책관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 SOC의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시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등 김진태 도정 목표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출장소 지위였던 '해양수산정책관'을 정식 국(局)인 '해양수산국'으로 변경한다. 바다를 끼고 있는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양수산국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 국제교류와 수출통상 기능을 맡아왔던 '국제통상과'를 분리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수출통상 기능은 기업지

원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공무원조직의 혁신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이나 기업의 행정 수요는 다양해지는데도 행정 기능은 전혀 바뀌지 않아 행정 경쟁력이 다른 부문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행정 환경은 몰라보게 변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방향이나 목적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기존 관념을 깨뜨리는 개편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점이다. 처음 시도되는 데다 다른 조직에서 성공한 형태라고 해 강원특별

자치도에 반드시 안착하리란 보장은 없다. 또 향후 발탁과 직급에 의한 책임자 임명이 조직에 미칠 영향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유능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이끌 경우 자칫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발탁인사는 과감한 탈락과 충원을 통한 신진대사가 전제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 보장제도 등이 유지되는 한 그 또한 쉽지 않다.

더구나 새로운 조직체계에서는 업무나 인사면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경쟁을 통한 성과 관리가 이뤄지면 대민업무 등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경쟁이 조직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요인이

정책관·해양수산국 신설 등 올 7월 단행

책임자 임명 조직에 미칠 영향 등 분석을

도의회 심의 과정 충분한 논의 전제돼야 성공

됨으로써 무엇보다 장기적 안목이 요구되는 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동안 유사업무를 둘러싸고 부서 간 소관 싸움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숙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조직개편은 그간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자치단체 조직의 모범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추진돼야 한다. 조직개편 요인이 생겼으면 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행은 전문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졸속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그리는 안목을 갖고 해야 한다. 앞으로 도의회의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